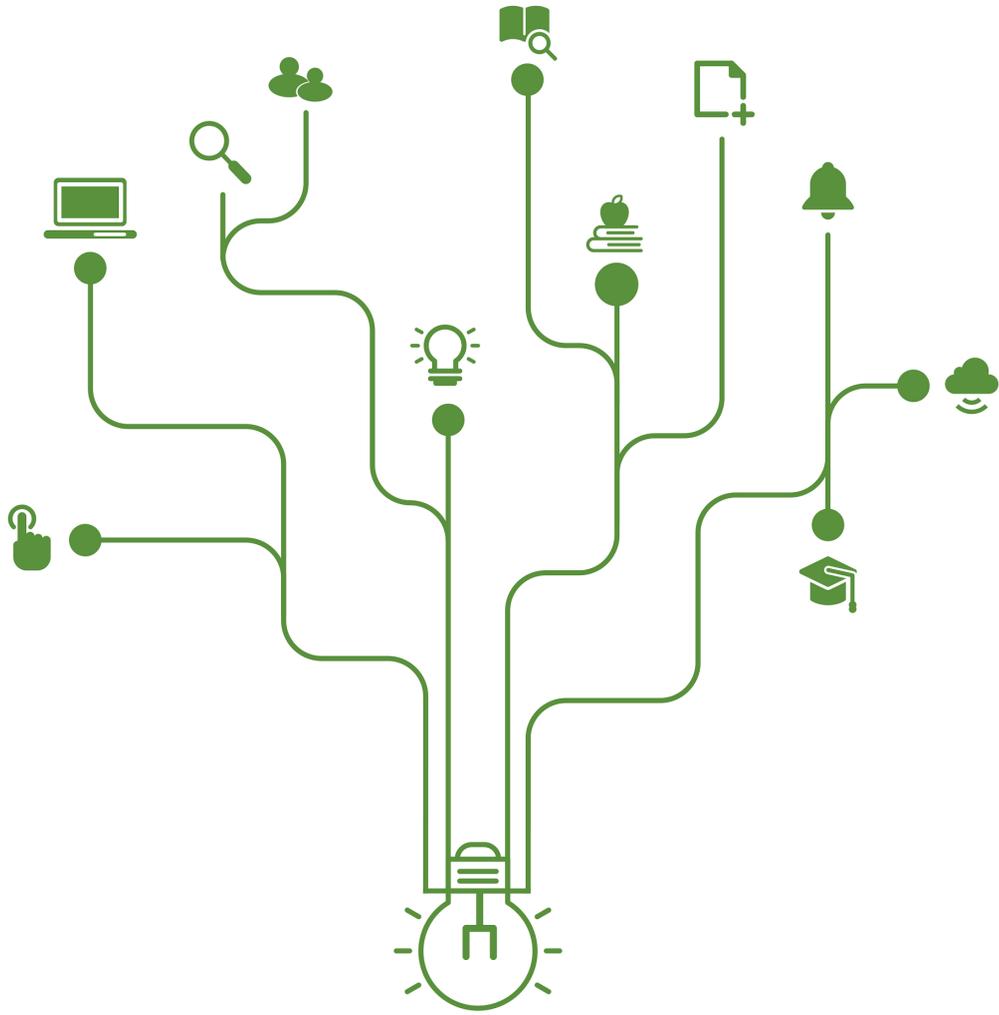


북한 세금제도와 국가-주민간 신뢰관계

최창용, 임을출



북한 세금제도와 국가-주민간 신뢰관계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을출(경남대)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따른 조세재정 체계 및 운용 변화를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실증적,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체제 이행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조세재정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시장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에 따라 달라진 경제활동 부문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야기된 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변화된 예산수입 세부항목들은 시장의존형 조세재정체계의 변화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시장화가 급진전되었고, 이에 따른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의 상호의존 및 공생관계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이 재정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시장화를 뛰어넘어 사유화의 진전에 따라 조세재정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시장 소득을 일정부분 합법화해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화의 진전과 세금제도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조세(또는 준조세) 수탈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세금이다. 북한의 세금제도는 제도화 수준이 낮고, 부패가 과도하게 개입되면서 세금 낭비와 주민 착취현상이 병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재정통제와 공정한 세금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북한의 조세재정의 시스템과 운영의 변화는 체제전환이나 체제내 구력 평가측면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조세재정 분야의 변화가 과도하게 시장의존적이고, 주민수탈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런 점이 북한 체제의 미래 향방과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대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따른 조세재정 체계 및 운용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날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 문명국가 건설 등 정권의 정당성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한 정권생존전략 고수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역대 최강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재정수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군사비 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시장화와 더불어 사유화가 크게 진전되자 당국도 이에 부응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조세재정시스템을 폭넓게 정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시장화와 사유화 진전에 따른 북한 당국의 조세징수방식, 제도화 실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국가와 세금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조세재정 분야에서의 변화 실태를 실증적, 심층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구나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 시장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많이 이뤄졌지만 북한 재정의 핵심 요소인 조세(준조세)실태와 조세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뤄진 바가 없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재정제도(법 포함)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고, 북한재정의 기능, 세출입 구조 등을 설명하는가 하면, 통일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북한의 재정개혁 관련 연구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정금융제도의 변화를 경제개혁조치로 평가받고 있는 2002년 7.1 조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조세재정의 제도 변화를 분석, 평가한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지만 한발짝 더 나아가 조세재정의 현장 실태와 징수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당국과 주민간의 관계, 제도와 주민간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학술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화와 사유화 진전에 따라 조세재정정책과 관행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연구과제이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수년간 축적한 조세재정 관련 정보와 문헌자료, 탈북자 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해 연구의 신뢰성과 질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존형 조세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수탈형 조세재정체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으로 분석할 것이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국가적 의무(조세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과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당국의 조세재정 시스템의 실체를 학문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시장

주체들, 특히 일반 주민들이 어떤 명목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세 또는 준조세(세부담)를 국가에 바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직업에 종사했던 수십명의 탈북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재정과 국가예산수입 원천

재정 수요와 국가예산수입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분배·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된다. 즉 북한에서는 재정을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 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 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¹⁾ 따라서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인 만큼 재정의 기능이나 재정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자본주의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클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재정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국가들 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재정은 예산수입과 지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이다. 국가예산 수입에서 특이한 것은 조세라는 세입원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1974년 2월 노동당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후계자로 확정되었고 그해 4월 1일 세금제도를 폐지했다. 그 이후 북한은 오늘날까지 재정이 고갈된 적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폐지한 나라’를 운영했다.²⁾ 북한 헌법 제25조는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는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선전에 불과했고 1974년 이후에도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소득세) 등을 세금이라는 명목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국가에서 여전히 거둬들였다. 사라진 것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받던 소득세, 협동농장 농장원에게 받던 농업세(농업소득에 대해 현물로 바치는 세금) 등이었다.³⁾ 오늘날 김정은 정권 시대에도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은 존재하고,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이같은 각종 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북한 경제가 급격한 생산력의 하락으로 계획경제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라 재정조달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신 시장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에 따라 달라진 경제활동 부문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 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야기된 재정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한 것이다. 북한은 2004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1) 통일부 홈페이지, 2009; <http://munibook.unikorea.go.kr/>(검색일: 2017년 11월 1일).

2) 북한 헌법 제25조

3) 고수석, “돈줄 마른 북한, 장마당돈주에 소득세 징수 나서,” 『중앙일보』, 2016년 3월 15일.

국가예산수입원천(13조)에 대한 조항을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따라 국가예산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수정한 바 있다.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서, 원래 원천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 등이었다. 하지만 2002년 7.1 조치를 기점으로 수입구조는 변화했다. 일부 항목이 통합 또는 폐지되어 지금은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사회보험료 수입, 토지사용료 수입, 국가재산판매 및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업이익금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의 이윤 중에서 기업소 내 부유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직접세에 해당한다. 거래 수입금은 기관·기업소의 생산제품을 다른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는 물론 협동단체 생산제품에도 부과된다. 거래수입금은 상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의 금액이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얻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거래수입금은 북한의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 수입 가운데 서 거래수입금이 43.2%, 국가기업이익금이 32.9%로서 사회주의경제에서 이뤄진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봉사료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기업소의 봉사요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거래수입금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은 2002년 7.1 조치에 의해 국가기업이익금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예산수입 원천이 단순화되었으며, 이는 2004년 재정법 개정에서 예산수입 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 협동단체이익금은 부과대상이 국영기업소가 아닌 협동단체라는 점 외에는 국가기업이익금과 성격이 같다. 협동단체이익금 납부대상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이며 협동농장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협동단체이익금과 생산협동조합의 생산물에 부과되었던 거래수입금 역시 7.1조치에 의해 협동단체이익금으로 통합된 바 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근로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항목이다. 국가재산판매 및 기타수입에는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수입, 무상 노력동원 수입, 국가수수료 및 관세수입, 벌금수입, 합영회사 및 외국인 소득세수입 등이 있다.

2002년 이후 신설된 예산수입항목으로는 토지사용료와 부동산사용료 등이 있다. 토지사용료 수입은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따라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경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군부대·협동농장·개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된다. 부동산사용료는 2006년 이후 처음 등장한 항목으로서, 토지를 비롯해 건물·임야 등에까지 사용료를 확대하여 적용. 이는 북한 당국이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세원 발굴에 부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7.1조치 이후에는 예산수입 항목뿐만 아니라 철도·버스요금, 전기사용료, 주택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이들이 예산수입의 주요 원천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가격에 들어있는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으로

4) 2002년 재정법 12조 국가예산수입원천 조항에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 수입금과 같은 국가 예산 수입원천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되어 있어 납부대상에는 생산재와 소비재가 포함된다.⁵⁾ 남한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기업소, 기관들에서 조성된 이윤을 분배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형태로 생산재, 소비재, 건설, 상업유통, 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국영기관·기업소가 포함된다.⁶⁾ 남한의 법인세와 유사하다. 협동단체이익금은 협동단체기업소(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들이 이윤을 분배하여 국가 예산에 바치는 자금이다.⁷⁾ 봉사료수입금은 봉사료에 들어있는 순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편의 봉사, 사회급양봉사, 여객봉사, 체신봉사, 관광봉사, 극장봉사 등 봉사부문기관·기업소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부과된다.⁸⁾

2005년 제정된 『국가예산수입법』은 거래수입금(또는 봉사료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또는 협동단체이익금)을 통합·폐지하고 국가기업이익금(또는 협동단체이익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토지를 사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1974년 세금을 폐지한 후 처음으로 개인의 시장수입에 대해 ‘개인수입금’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후 『국가예산 수입법』을 개정하여 2007년에는 토지사용료를 부동산사용료로 개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가기업이익금과 협동단체이익금을 다시 폐지하고 거래수입금(또는 봉사료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또는 협동단체이익금)을 다시 국가예산수입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2017년 현재 국가예산 수입 항목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기타 수입과 경제무역지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4월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기광호 재정상은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산위원회에서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⁹⁾ 기 재정상은 2016년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06.3% 늘어나 102.1% 달성되었으며, 지출은 99.99로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을 통하여 우리는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국가 수중에 최대한 집중시키고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쓴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초강경 제재’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이 재정확충의 토대가 됨을 인정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먼저 살펴봐야 할 정책노선이 지난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핵개발 병진 노선이다. 이는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초 3차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재래식 무기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줄이고 그 돈을 주민생활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 병진노선에서는 핵보유를 통해 무한한 군비 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그 기술과 재원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경제건설’에 보다 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5)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5, p.34.

6)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30.

7)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231.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65.

9) 올해 국가예산지출 전년대비 105.4% ↑, 국방비 비중 15.8%, 통일뉴스, 2017년 4월 12일.

2013년 3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강조했다. 다시 말해 핵무력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는 재래식 무기 증강 등에 소요되는 국가적 자원을 축소하고 경제발전 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핵보유 지위국 확보와 그에 기초한 병진노선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근본토대이다. 경제-핵개발 병진노선이 핵무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민경제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담보로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17년 3월 30일 ‘핵-경제 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북한은 비망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노선을 제시한 것은 공화국 역사의 일대 사변이라며 지난 4년 간 북한의 국력과 지위가 높은 경지에 솟구쳐 올랐다고 자찬했다.¹⁰⁾ 비망록은 병진 노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늘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로 무한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그 기술과 재원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경제건설’에 보다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그 해 3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홍보책자인 <100문100답으로 보는 오늘의 조선>에서도 “병진노선은 원자력공업에 의거해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족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며,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¹¹⁾ 병진노선을 재정수요 측면에서 보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기존 군 경제에 우선해온 자원의 배분을 인민경제로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적 구상은 주민들에 대한 세금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온 측면이 있다. 북한은 무한 군비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력을 강화한다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군비경쟁 악순환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자산 위협에 맞서 계속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거나 기존 무기를 개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재정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정원천을 발굴해야 하고, 결국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0) 『조선중앙통신』, 2017년 3월 30일.

11) 『통일뉴스』, 2016년 3월 31일.

세금의 개념과 관련 법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제 세부담(tax payment)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70년대 이후부터 세부담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은 세금을 “국가가 자 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얻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들로부터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으로 정의되고 있다.¹²⁾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세부담에 포함되는 세(稅)의 범위에는 주로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전기세, 수도세, 전기사용료, 각종 맹비(당, 여맹, 청년동맹 등 단체 소속원이 내는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국가의 부동산(토지, 건물, 자원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인 부동산사용료는 지난 2005년에 채택되고 2011년에 수정보충된 국가예산수입법 제4절(39조~43조)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세외부담’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주로 돌격대, 인민군대 지원비등을 지칭한다. 한국에서 세외부담(nontax payment)는 조세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지만 조세처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주민부담을 가리키며, 이는 일종의 준조세 (quasi-tax)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외부담은 정부의 수입획득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라서 점에서 세금과 구별되나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정부로의 소득이전이라는 점에서는 조세적 성질을 갖는다. 세외부담은 대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통례이다. 하지만 북한에도 세외부담을 적용하면서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개념인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지칭한다.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 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세부담과 세외부담 그리고 준조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한 부분과 부패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들 개념을 혼용해 사용하고자 한다. 탈북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북한 주민들도 세부담과 세외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법률은 제정되어 있다. 1993년 제정되고 2015년 수정보충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통칭해서 ‘세부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세외부담과 준조세도 사실상 넓은 의미로 조세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973.

김정은 시대의 시장의존형 재정운영시스템과 특징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성적 및 작동원리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시장의 제도화 수준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더욱이 국영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은 상당 정도 합법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이제는 시장이 계획보다는 지배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경제를 계획/시장의 이중경제론으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2013년 이후 현재의 북한경제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 이제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부문이나, 아니면 비공식적 시장경제 부문이나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미 시장경제 원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부문에까지 침투해 이제는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지배적인 경제 원리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만 해도 시장경제는 비공식영역에 존재했으나 2002년의 7.1 조치 이후 공식경제에 편입되었고, 더욱이 김정은 시대에는 공식경제에 편입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상황이 크게 변화, 국영기업의 시장거래 허용의 폭이 대폭 넓혀졌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시장거래 활동 중 상당부분은 과거에는 비공식적 성격을 띠었지만 이제는 공식적 성격을 띠게 됨. 따라서 이제는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로 구분하는 유용성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즉 김정은 시대의 경제현실 및 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이 보여주었던 (체제)이행경제의 초기와 유사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계획·시장의 상호 결합 상태는 유형별로 소비재시장, 생산재 시장, 서비스 시장, 노동시장, 금융·외환시장, 주택시장 등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까지 하다.

2012년 4월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2012년 7월 이른바 '6.28 새 경제관리체계'를 제시하여 협동농장, 국영기업소·공장 등에 대폭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인민생활의 향상을 꾀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다. '6.28방침'에 따르면 국영기업은 계획 수행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시장생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농업부문에서도 규모가 축소된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즉,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 '6.28방침'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된다.¹³⁾ 김정은 역시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6.28 방침의 실체가 일정부분 확인된 바 있다. 2014년 들어서도 북한은 '포전담당 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시행하였다.¹⁴⁾ '6.28 방침'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의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한 제한적인 경제개혁의 확대 움직임도 주목 이는 김정일

13)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년 5월 10일.

14)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시대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개혁적 요소가 상당히 진전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체제이행단계에 돌입하면서 재정 및 조세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경제 전체가 창출한 잉여를 중앙정부가 수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각종 조세 및 준조세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업 및 주민에 대한 수탈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적절히 관리/통제하고 있다. 결국 약탈국가적 성격 과 발전국가적 성격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격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의 개정에 의해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했다. 기업소지표는 이번에 새로 만든 것. 종전에는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은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음. 그런데 2015년 법개정을 통해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 하여야 한다(제13조,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가는 이제 상당수 국영기업에 대해 기업이 달성해야 할 의무(계획지표)를 대폭 줄여주거나 없애고 있다. 그 대신 각종 원자재, 자금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 액상계획(현금계획)만 부여했다. 국영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 납부의 의무만 있다. 기업 스스로의 생존, 특히 종업원들의 생계유지 책임은 맡고 있다. 국유기업, 즉 기업의 법적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잔여소득 청구권, 통제권은 기업에게 있는 것이다. 물론 양도권은 기업에게 없다. 이런 기업은 사실상 사영기업에 가까운 것이다.

표-1. 김정은 정권의 새 경제관리체계 내용

| 분야 | 내용 |
|---------------|--|
| 경제정책 주관 기관 | · 내각이 ‘경제사령부’ 로서 주도 - 당의 내각 경제사업 간섭 배제 |
| 농업분야 | · 분조단위 축소(10~25명 → 3~5명으로 축소) · 작업분조에 토지 할당, 초기생산비용 국가 선지불. 협동농장·기업소·각급 기관들의 보유 유희토지 작업분조에 임대 · 생산비용, 곡물수매가격 시장가격으로 계산 · 생산물분배방식: 정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국가와 작업분조간 생산물 7:3 비율로 분배, · 목표량 초과분의 작업분조 처분권 부여 |
| 국영기업소 분야 | · 최초 생산비 국가가 투자, 기업소 자체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원자재 구매, 생산·판매한 후 국가와 기업소가 7:3비율로 판매수입 분할 - 생산비용, 생산물의 판매가격 시장가격으로 계산 - 생산설비, 자재, 전력 등 기업간 자유거래 허용 - 생산물의 시장판매 허용 - 국가납부금은 외화로 납부, 외화계좌 개설 허용 · 기업소 획득 판매수입, 재투자 등 자율 사용 허용 단, 개인에 의한 공장·기업소 설립은 불허 |

| 분야 | 내용 |
|--------------------|---|
| 노무관리 및 임금소득, 배급제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기업소 간부는 당이 임명 ·기업소의 개인투자 허용(지방공장 한정) · 배급제시스템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산제 공장·기업소(군수공장, 중앙이 관리하는 특급·1, 2급기업) 국가기관 사무원·교육·의료부문 종사자는 배급제 유지 - 국가예산제 공장·기업소의 '생필직장', 독립채산제기업은 전면 임금제 실시 및 임금현실화 -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생산성 높은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 지불 (10배~100배 인상)허용 -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는 유지 |
| 서비스 · 상업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 부분 합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상점, 편의봉사소, 식당에 개인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 및 개인 노동력 고용 허용(이윤의 10~20% 국가납부) - 개인 투자자 및 개별 고용 노동력은 자신이 투자하는 국가 및 편의협동기관에 입직하여 소속되어야 함 |

자료: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동북아 경제연구』 2013, p.186 토대로 필자가 수정보완.

시장 및 주민 의존형 재정운영시스템의 구조와 특징

가. 김정은 정권과 시장의 공생 구조

북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장세를 내야 한다. 매일 징수된 장세는 인민위원회 산하 재정국을 통해 해당지역의 시 재정으로 활용되며 상부기관인 도인민위원회에 보고된다. 북한에서 장세는 북한 시장경제의 싹틔줄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와 사회, 주민을 연결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규모는 해당지역의 재정을 넘어 북한 사회 전체의 주민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정도의 큰 액수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하다 보니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에 대한 단속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시장을 관리, 장악하겠다는 방침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달하고 있다. 실제로 도, 시, 군 행정기관이 주요 업무는 시장의 상품가격을 통제내서 평양(내각)의 행정부서들에 보고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관리 일꾼은 지역 내 시장들을 돌며 각종 상품가격을 빠짐없이 점검해서 내각에 보고한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벌이 수단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에 더욱 주력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시행된 각종 단속 조치들을 살펴보면 이런 흐름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시장화가 급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과의 상호의존 및 공생관계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재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예산수입은 기본적으로 국영 및 협동단체 기관, 국영기업소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비국영기업,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세 항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래 북한에서 부동산사용료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소유권 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사용료(농업토지사용료수입금, 부지사용료수입금, 건물사용료수입금,

어장사용료수입금, 수산자원증식장사용료수입금, 자동차도로사용료수입금, 기타 부동산사용료수입금)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예산수입항목에서 '기타 개인소득납부금'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상업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장사용료와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개별적인 상업거래를 해 얻은 이윤에 대한 부과금이 포함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6·28 방침' 등 새로운 경제 조치와 관련해 주민의 시장 소득을 합법화해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화의 진전과 세금제도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 북한은 외부적 지원 외에 자체 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재정 강화는 대외 원조나 대외협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 확대와 시장으로부터 세입 증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일부분인 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5년 채택되고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의 제62조에서는 "공민은 시장 같은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에 적극 편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확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시장화를 통해 민간 및 국영기업이 창출한 각종 잉여를 정부가 광범위한 조세 및 준조세를 통해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더구나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 최근 주민 대상 세금정책 관련 특징

최근 북한 내 동향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세부담, 세외부담, 준조세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실상 세금이라 볼 수 있는 징수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북한 주민들은 1년 내내 당국이 주도하는 각종 건설, 동원 산업에 현금, 현물, 노동력 등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당국이 제공하는 각종 공적 자본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금을 일일이 징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번호판 교체 사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세금 항목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집요한 현금 흡수 전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금을 징수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연, 분기 별로 건던 세금을 주, 일단위로 걷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금은 즉각적인 현금 동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매일 징수되는 시장 장세의 경우 지방 정부의 은행으로 바로 입금돼 정부 재정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들 일부가 중앙으로 상납되며, 나머지는 지방정부 자체의 재정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금을 복한 돈이 아닌 외화로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북한 당국 스스로도 내화의 가 치가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외화벌이 수단이 막히자 외화 마련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징 수하는 금액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한다. 과중한 세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 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간부 들이 사사로이 걷어가는 세금이 존재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넷째, 세금을 체제에 대한 충성과 연관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장군님이 부모 없는 어린이, 자식 없는 노인들, 그리고 인민경제발전을 위해 애쓰는데 장군님의 참된 전사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불효라고 얘기하며 세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세금은 우리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철저히 조직화 된 사회 로 북한의 모든 주민은 어떤 형식이든 조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걷는 시스템까지 완성했다. 그러나 당이나 직장 등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 부양자들의 경우 이러한 구조에서 빠질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배급소가 공식 폐지되고 그 역할을 동사무소가 대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 징수 활동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무소는 앞으로 주민 감시와 통제, 군부대나 돌격대 지원 물자 마련, 고아원 지원, 도로 수리나 미화 등 각종 동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개발이 곧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7월 4일을 기념해 7.4혁명이라 명명하며 공장기업소 별로 각종 경축모임을 조직했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향후 이로 인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는 조세재정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북제재에 따른 재정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항목을 개발, 확대적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준조세징수를 통한 착취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¹⁵⁾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계활동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 다는 것이 북한 내부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대북제재의 후과 로 국정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털고 노력 동원을 한층 강화 하는 것으로 일부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 데일리 엔케이의 탈북자 출신 기자인 강미진의 자문 내용, 2017년 10월 31일.

이러한 움직임은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부 주민들은 “해마다 새로운 품목의 세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듯이 꼭 어떤 명목의 세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음. 대북제재에 자금줄이 막힌 당국이 주민들의 외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다양한 나라의 화폐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외화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인민반에서 거두는 각종 명의의 자금 조차 모두 중국인민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개발강화는 곧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미국 주도로 추가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경제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통신(9.4)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책동을 견제하고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부문별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집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자신감에는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개인이나 기업 같은 각 경제주체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6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132명을 대상으로 올해 6~8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70%가 장사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북·중 무역의 경우 공식무역보다 비공식 밀무역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영향을 덜 미치는 구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장화로 개인이 경제주체로 나서고 있어 밀무역은 더 확장되는 추세이다. 김정은 체제는 이런 자신감 속에서도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9월 1일 '위대한 강국의 시대'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론하며 "형편이 어렵고 더이상 참아낼 수 없을 때도 결코 물러설 생각을 마시라"며 "이 길을 곧바로 가면 반드시 더 큰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한걸음도 주춤할 수 없다"고 주민을 독려하고 있다.

조세제도와 주민간의 신뢰관계 : 주민수탈형 조세의 실태

시장활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조세의 등장

북한 시장 관련 세금 중에서 대표적인 자릿세이다. 북한 당국은 2004년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해 종합시장을 승인하였는데, 이때부터 북한역의 시 구역마다 종합시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장관리소도 생겨났다. 당시 자릿세 등의 형식으로 조세를 걷게 되는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수익도 점차 늘게 된다. 사실 당국 이 장마당을 통해 자릿세를 걷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부터로 파악된다. 당시 치안을 담당했던 인민보안원들이 장사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100원, 200원씩을 걷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렇게 걷은 돈은 개인이 착복하기도 하고, 실제로 장마당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도 했다. 자릿세가 공식화 된 건 2004년 종합시장이 합법화되면서부터인데, 매대에서 팔리는 물건이 고가나

저가나를 기준으로 두고 임의대로 자릿세를 매겼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매대의 규격, 거래되는 상품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조세가 장세(매대사용료)이다. 종합시장 매대는 보통 50~60cm 정도로 자릿세를 시장 관리소에 내면 할당받을 수 있다. 상품의 종류나 매대의 크기에 따라 매일 장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시장관리소 관리원들이 매일 시장을 돌며 일일이 징수하고 있다. 데일리NK 통신원들에 따르면 1일 장세는 북한으로 500~1000원 정도이다. 북한 전역에 분포한 시장을 400여개, 그리고 하나의 시장에 평균 1500개 정도의 매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총 매대는 60만 개이고,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하루에 장세만으로 6억 원(7만5000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벌고 있다는 단 순 계산이 나온다. 통일연구원은 올해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 공식시장은 총 404개로, 전체 매대 수를 109만 2992개로 추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공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둬들이는 장세(매대 사용료)가 약 14억 4855만원~18억 4761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시장환율(1 달러=북한 돈 8300원)을 적용해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7만 4525달러~22만 2604달러로 추산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한 개 군에 2개의 시장을 공식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 매대는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며 2012년 기준으로 신발매대 등 좋은 매대는 자리당 150만원, 낱새매대는 10~20만원에 거래된다. 필요에 따라 매대를 3~4개씩 구입해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장세는 시장관리소가 거둬들이며, 가장 싼 낱새매대가 하루 300원, 가장 비싼 신발 매대는 하루 2,000원 정도이다. 평양 장마당의 경우 하루에 약 500만원의 장세 수입이 있으며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100% 해당 군에서 사용한다는 증언이다. 장세 수입을 군 사무원, 동사무소, 연료보장자 등의 월 생활비와 군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임대료. 북한 당국은 백화점 대형 상점 등을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 특히 시장 수익 일정분(30%)을 정기 징수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상납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보관료. 자전거보관료와 짐 보관료, 판매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국가납부금 등 여타의 세금이 공식시장을 통해 가동. 관세. 수출입 관세는 3~4%로 추정. 관세는 내각경제에만 책정한다는 증언이 있다. 2경제, 3경제로 불리는 당, 군수분야의 수출입에는 일체의 관세가 없으며 검열조차 적어 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회사의 이득금은 수출에서만 3~5%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입에서 뒷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챙긴다고 한다. 또한 경유, 가솔린 등을 수입할 경우 최고사령부 명령분으로 현물 1%를 떼어 군대로 돌린다는 증언이 있다. 식량에는 관세가 붙지 않으며 생필품이 아닌 완구 등 기호품, 외국담배, 외국술 등에 관세를 높임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관세를 높인 물품이 오히려 주요 밀수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반면 호텔에 쓰는 물품은 관세를 낮춤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집매대는 신용매대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매대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올해 초 그동안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개인집 장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집에서 계속 장사를 하면 벌금을 물리겠으니 당국이 개설한 공식 '종합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라는 것이다. ‘집 매대’는 1990년대 주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 간식거리를 팔기 위해 작은 규모로 시작됐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해 각종 가전제품(TV, 냉장 기, 세탁기 등)을 비롯한 식품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집 매대는 투자부터 유통, 판매까지 가족이 한 회사처럼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는 물론 운영자에게도 편리한 운영 방식이다. 초기 자본이 없어도 집 매대만 꾸리면 판매상품을 외상으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외 상으로 팔기도 해 ‘신용 매대’로 불리기도 한다. 집매대는 농촌지원시기 시간 통제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릿세나 장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상품을 시장 경비에 맡기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담도 없어 모든 점에서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집 매대는 주민 거주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 지역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배달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간부들과 돈주(신흥부유층)들의 경우 종합시장과 상점에서 상품 구매하면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될 수 있지만, 집 매대의 경우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자주 찾는다고도 한다. 북한 당국이 개인집 장사를 단속하고 나선 이유로는 활성화 되는 개인집 장사를 그냥 방치하면 시장 매대에 입점하려는 상인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양강도의 일부 시장에서는 매대의 3분의 1 이상이 비어 있을 정도로 개인집 장사 행위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매대가 활성화 될수록 이로 인해 장세 수익 등이 감소될 것을 예상한 북한 당국이 미리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장 관련 각종 징수액은 관리소 관리원이나 보안원등 중하급 간부 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당국 입장에서는 월급을 따로 주지 않고도 충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공식시장 내 활동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역시 벌금이나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선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개인집 장사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메뚜기 장사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장세의 50~70%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공식 매대가 아닌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일종의 ‘메뚜기 장사꾼’에 대한 통제도 시작되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주민들의 장사활동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최근 단속은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메뚜기 장사꾼들에 일반 장세의 50~70%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방식으로 장사를 묵인해왔다. 북한 현지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단속이 일시적인 것으로 일종의 캄빠니아(캠페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장사꾼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국도 쉽게 포기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몇 년간 장사단속을 하지 않아 이전(김정일 때)보다 나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 했는데 우리 생각이 틀린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가 을 동원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업 확대에 대한 월 수익금 징수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지방 정부의 자율성에 따라 시

(市) 인민위원회 상업부에서는 최근 사(私)기업을 독려하는 추세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구멍가게, 그리고 미용실까지 상업관리소 소속이라는 간판을 주고 월(月) 수익금을 징수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때문에 사기업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 또한 시장화의 진전과 주민들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그동안 발전하지 않았던 사업(비즈니스) 형태도 상인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용실'인데, 개인 미용실의 등장은 그 역사가 오래 됐다. 1980년대부터 도시에 자리 잡은 국영미용실 미용사들은 밤에 몰래 자택에서 파마를 해주면서 돈을 벌었다. 지 금도 이들은 낮에는 국영에서 일하고 공휴일과 퇴근 후 개별적으로 미용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방 정부가 수익금을 내라고 할 명분이 없다. 또한 역전, 종합시장 등 역세권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이발과 미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역시 시장 관리소에 서 단속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미용실을 짓고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의 10%를 상납하게 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발, 미용 등 편의봉사 분야뿐 아니라 모든 사기업에 적용된다. 일단 시 인민위원회는 영업 시작 한두 달 자리 잡을 동안 상납금을 내 지 않아도 봐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 돈벌이가 잘되면서도 벌지 못했다고 속일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르게 되는 데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고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기계 설비를 회수하 도록 조치하고 있다.

세부담의 다양한 양태와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

가. 세부담의 다양한 양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과거에는 없었던 개인에 대한 세부담 혹은 세외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지만 사실상 준조세 형식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는 세금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를 세외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가동원사업에 노동력이나 일정한 현물을 제공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집단주의적 행태로 이해됐다면, 최근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 공 서비스, 공적자본에 대해 조세 형식의 돈을 징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화 되는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를 돌파기 위해 조세와 내부자금 흡수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 새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외화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북한 내화보다는 달러, 위안화 등 외화로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특징이다. 결국 세부담은 한국의 준조세 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세금이다.

북한에서 비공식적 세금은 북한의 국가기구와 당 등 모든 조직이 생존하는 원천이다. 북한 당국은 국가재정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비, 인민군대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보급, 시·군 단위에서의 도로 및 공공건물 건설, 주택건설, 희천발전소 건설과 같은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 동원된 노동력의 식량지원 등 각종의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수요들이 주민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준조세들로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준조세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서 7·1 조치 당시 발표기준 1인당 월평균 2천원~3천원 임금의 몇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2012년 조사)이다. 최근에는 준조세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세부담을 감당해야 했던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세부담의 다양한 형식과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탈북자 김00 씨는 세부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공장기업소는 국가납부금은 당연히 바치는 거고 충성의 자금이라고 바치는 건 개인들이 자기 성의껏 하는 겁니다. 북한돈으로 바치는데 초급당비서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20만 씩은 냅니다. 이걸 당원, 비당원 상관없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만 빼 놓고는 모두 내는 겁니다. 김정은이 등장한 3년 전부터 이걸 냈는데 공장에서 모으면 그래도 돈이 좀 됩니다. 우리 기업소 같은 거는 80만 원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 드렸듯이 자기 성의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50원, 100원, 1,000원도 냅니다. 돈은 초급당비서를 통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매개 공장기업소에 1년에 개가죽을 몇 장, 토끼가죽을 몇 장 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가납부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은이 특별히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밑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위로 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혁명자금으로 다시 내려 보내고 하면서 나라경제를 운영하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김00, 남, 67살), 2014년 2월 탈북, 지역 : 대흥단군, 경력 : 수리공장 근무)

북한 내부 주민들을 통해 입수, 수집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본 결과 지역에 따라 해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외 부담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노동당, 직맹, 청년동맹, 직맹, 여맹, 농근맹 등 각종 조직에 속해있어 조직원으로써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조직별로 당비, 직맹비, 여맹비 등 월별로 해당 조직에 바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동원비용이라든가, 인민군대지원이라든가, 돌격대지원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이 있다. 지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용되는 난방비용도 학생들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세부담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전기세가 있다. 북한 배전소 담당자들이 주민들의 도적 전기 사용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 받는 것을 넘어,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주민들을 단속하는 등 더 적 극적인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양강도 해산시 마산동에서 사는 한 40대 남성은 해산청년광산 전기를 몰래 끌어 쓸다 단속돼 2달 간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노동단련대 처벌은 주로 월경이나 밀수,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도적전기’를 쓴다는 이 유로 인해 단련대에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배전소 담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내지 않고 전기를 쓰다가 단속에 걸린 이 남성은 ‘도적전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기만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실제로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10가구 중 4~5 가구는 공장 기업소 전기를 끌어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 해산시에서는 이 같은 코걸이(간부 집이나 공장기업소에 들어가는 전기선에 다른 선에 연결시켜 전기를 끌어 쓰는 방법) 전기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100위안을 배전소 담당자들에게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름에 한 번 씩은 담배를 바치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배전소 관리자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관행은 오래되었지만, 적극적인 단속 정책을

퍼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둘째, 토지세로서, 북한 당국이 2016년 말부터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토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북한 당국이 토지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이후에도 세금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1편(북한은 1.8m²를 1평으로 규정)당 4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갑자기 70원으로 올려 받기 시작했고, 2017년 봄까지 징수사업이 이어졌다. 많은 평수를 가진 농민들의 경우 갑자기 세 부담이 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토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차량 이용 관련 세금(번호판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세, 주차료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이 2016년 말부터 오토바이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재등록과 함께 번호판 교체 작업을 시작해 1년 여 만에 완료했다. 신규 번호판 구입을 강요하면서 북한돈이 아닌 중국 위안화로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대북제재에 자금줄이 막힌 당국이 주민들의 외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번호판 교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과 물품 이동을 통제하는 '10호 소초' 통과를 차단하는 등의 강도 높은 단속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때문에 장거리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은 번호판 1개 당 가격을 114위안으로 책정하며, 외화 확보에 목적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리인들의 착복 행위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 보안서 차량 감독소에는 갑자기 200위안이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 가격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300위안을 내면 더 빨리 처리해 준다"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벌이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차량 재등록 및 번호판 교체 사업의 이면에는 북한 당국이 사유화된 차량들을 파악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 밀수꾼들을 통해 들여온 불법 차량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 평양에 진입하는 고속도로 입구에 톨게이트를 세워 비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평양 시내에서는 도로변에 세운 개인 차량들 까지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개인 차량 운영을 자금 확보와 연관하기 위해 당국이 각종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7년 5월 초부터 북한을 오가는 중국인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높은 통행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 세관의 경우 북한을 출입하는 중국인들에게 항목별로 내야 하는 외화를 따라 지정하며 돈을 걷었다.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다양한 나라의 화폐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인이 내야 하는 통행세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도시경영세로 10유로를 내야하고, 두 번째는 무역세로 100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세 번째는 200위안의 초청장 비용인데, 위의 세 가지 항목은 한 달에 한 번 내야 한다. 특히 무역과 상관없는 중국인들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라선 수출입국사업자가 발급한 출입증에 대한 비용으로 북한에 입국한 이후 근처 북한 은행에 출입증을 제시한 후 53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결제가 끝나면 출입증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때서야 북한 내 숙소 이용과 출구도 허용된다. 이 금액은 매번 북한을 드나들 때마다 지급해야 한다. 앞선 4개 항목을 합하면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1020위안, 한화로는 1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사를 위해

북한을 오가는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로화나 달러화가 없는 경우 위안화로 받고 있는데 수시로 바뀌는 환율 때문에 난감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넷째, 조직생활 자금이 있다.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월급의 일정액을 당비와 직맹비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걷고 있다. 노동당 당원들은 월급의 2% 를 당비로 납부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등으로 공장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의 당비 납부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당원증 재교부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당비와 맹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자들이 본인이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월급이 거의 의미가 없다 보니 당비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비 청 산을 요구 받은 근로자들은 월급 액수 자체를 모르니 당비 역시 얼마나 납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따라 당 비서가 일일이 당비 액수를 알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매해 10월 말은 당비와 맹비 납부를 정상하는 연간 결산총회 기간으로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직에 망라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연간 결산총회에 참가. 연간 진행한 동원에서 빠졌다면 빠진 동원일 수만큼의 사회노동비용도 내야 한다.

8.3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준조세도 생겨났다. 북한은 전체 주민들을 각 부문별 조직에 묶어 개개인의 생활과 사고까지 철저히 감시, 관리한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했던 1974년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발표된 이후 전 주민에 대한 조직생활은 치밀 하게 관리되고 있다. 북한에서 헌법보다 앞서는 10대원칙은 “조직생활의 격일 및 주간 총화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을 척도로 자기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신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해야 한다(8조 5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지시에 따라 모든 당원들은 당 생 활총화, 비당원들은 자기가 속한 근로단체조직이나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생활은 이전 형식적인 통제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이후 종합시장이 합법화되면서 공장기업소와 개인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장려됐고, 근로단체조직의 조직생활은 점차 이완되어 왔다.

‘독립채산제’가 강화되면서 각 공장기업소에서는 돈을 벌어서 일정액을 해당 직장에 바치고 나머지 이윤은 개인이 가지도록 하는 ‘8.3’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직장에 적(籍)만 걸 어두고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 직장에서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생활총화를 주(週)단위에서 월(月)단위로 조정해주거나, 각종 조직활동에서 빼 주는 편익을 제공했다.

최근 2~3년 간 ‘8.3’문화가 더욱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공장의 당 조직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선만 보고하라”고 지시할 뿐 오히려 외부에서의 돈벌이를 장려하고 있다. 생활 총화도 1달에 1번만 형식적으로 하도록 편익을 제공한다. 8.3돈은 직접 돈을 받는 조직이나 조직 의 수장들에게 흘러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중앙 조직에까지 상납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

북한은 1974년 4월 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공포했다. 실제로 세금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라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형식에 그쳤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그러나 사 라진 납세의무는 농촌동원, 인민군대 지원, 충성자금 등 각종 세부담(세외부담)의 형태로 나타 났다. 외화벌이(송이버섯 수매 등), 건설 등에 노력동원과 물품지원, 좋은 일 하기 운동(파철, 파동, 파지 등 수매) 등 그 방식도 다양했다.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세 혹은 준조세의 종류들은 수가 많고 다양했다. 탈북자들이 나열하고 있는 세부담의 종류들을 키워드(주제어) 중심 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 세부담, 세외부담, 사용료, 재정, 외화벌이, 수수료, 전기세, 수도세, 꼬마과제, 장세, 수익금, 납부금, 꾸리기, 비용, 보험, 8.3. 등이다.

북한식 사회주의경제가 구현되던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세부담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성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사 회 전체 분위기는 자발성을 강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주는 것 없이 내라는 것만 많은” 상 황에서 인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중간에서 착복하는 금액을 세부담에 얹히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탈북자들은 이러한 세부담을 세금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세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각 가정에 명목상 부과하는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건물관리비 등은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의 생산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은 아니라는 증언도 있다. 북한의 관리규정은 주민이 돈을 내지 않고 기관에서 무상으로 고장 등을 수리해주게 돼 있으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관리유지비라 는 것이다. 실제 탈북자들도 이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국정 가격으로 싼가격으로 매겨져서 무시할 만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국정가격으로 매겨진 전기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가 아니라 실물(색테레비, 전기밥가마 등) 보유에 따라 정액으로 매겨졌다는 증 언도 있다.

북한 정부의 입장은 일반 주민들에게 “세부담(세외부담 포함)을 안기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 김정일이 보안성에 “세부담은 반당, 반혁명행위”라고 통보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재정은 부족한데 국가대상 건설 등을 분담시키는 상황에서 ‘자발성’을 띤 세부담 형태는 지속될 수밖 에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세부담은 크게 건설·군대 등에 물품지원, 학교세부담, 외화 벌이과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형식상 자발성을 띠고 있으며, 물품으로 내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물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돈으로 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많다. 일반 주민들은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내는 각종 세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날 김정은 정권아래에서 각종 세부담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래 내용들은 탈북자들이 전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세(준조세)의 징수 실태에 대한 다양 한 증언들이다.

▲ 김OO(여, 20, 2016년 8월 말 탈북, 량강도 혜산시)

세부담 : 학교에서 농촌동원 등 세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선생님한테 돈을 줬 기 때문에 일체 모든 걸 다 빠져요. 학교꾸리기 하게 되면 어머니가 통 거로 돈 대주고 선생 생일에도 엄청 넣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하다못해 책상 들일 있다든가 하는 것도 “애는 할 줄 모른다. 집에서 곱게 자랐으니까.”하고 학교에서 안 시키는 거예요.

▲ 이OO(남, 23, 평양거주. 김책공대 졸업)

꾸리기(각종 건설, 조정사업 등) : 종합대학은 돈 많은 사람, 간부자식들이 많이 갑니다. 그 런데 김책공대는 공과대학이라 그런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뇌물 등 비법을 없앤다고 해 서 총장이 다 떨어지고 실력위주로 뽑아서 대학 붙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대학에 내는 돈이 없습니다. 대학에 낸다는 게 꾸리기 한다며 봄에 벽 회칠 다 시 할 때나 좀 있습니다.

그밖에 돈을 냈다고 한다면 수도건설에 지원해서 무슨 메달, 훈장을 받거나 입당하기 위해 서 지원사업 명목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점수 높여 달라고 교수한테 돈 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10달러 정도 내면 아마 점수를 높여 줬을 겁니다. 시험 기간에 배워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돈 모아서 내는 건 있습니다. 한 소대에 3~4명인데 북한돈 5천원씩 냅니다. 5천원이면 담배 2곽 사는 돈입니다. 이걸 인사로 드리는 거지 점 수 높여달라는 건 아닙니다.

▲ 김OO(남, 60, 2015년 탈북, 량강도 운흥군)

수익금 : 83이라고 해서 돈을 내면 직장에 출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직 당생활, 저녁에 학습회의나 참가하는 겁니다.

▲ 최OO(여, 36, 2016년 탈북, 혜산시 연풍동)

꾸리기 : 학교졸업할 때 선생님한테 선물해주려고 거두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학교, 학급마 다 달라요. 꾸리기 사업 같은 건 견어요. 세부담이라고 하는데, 위원들은 얼마정도 그 다 음에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하고 정 없으면 안 내고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전처럼 강 요는 안 해요. 옷도 없어 학교에 못 오면 좀 사는 애들보고 “이렇게 좀 해서 주자” 그 러면 줘요. 그럼 선생님이 개네를 또 해주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은 애들을 잘 다룰 수 있고 과외도 많이 시킬 수 있는 선생이에요. 그런 선생이 담임을 맡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한테는 계기 때마다 선물도 주고 그래요.

▲ 박은순(여, 2014년 탈북, 혜산시 거주)

꾸리기 : 학교는 국가에서 돈을 걷어 들인다는 건 없는데 본인부담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학급에서 무슨 비품을 산다 하고 걷는 게 많거든요. 북한에서는 무슨 좋은 일이라든가 명 칭을 붙여서 돈을 걷어요. 날마다 돈을 달라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애 들도 엄마한테 욕먹기 힘드니까 하룻밤은 이렇게 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침에 책 을 넣고 학교 나가기 전에 딱 서 가지고 “엄마 학교 내야 되는데 돈 좀 주시오.” 하면 은 막 욕하면서도 주는 거죠. 애가 축 잡힐까봐.

▲ 이00(여, 60)

와크 : 개인무역쟁이들은 무력부나 보위부에 적을 두고 와크를 받아서 무역하기를 제일 좋아해요. 힘이 세기 때문에 사법검찰이 보위성이나 무력부에서 와크를 받은 건 치지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최고사령관이 김정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총대장 밑에 있는 거길래 이걸 잘 못치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다 소속을 두고 와크를 받는 거예요.

중국개인들하고 무역이 되면 청진 무슨 모란지도국 창고에 상품이 들어온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무슨 해삼을 준다든가 전복을 준다든가 북한산 무슨 이렇게 주고 상품을 받아오잖아요. 상품을 받아오게 되면 개인장사꾼들이 장마당에서 북한돈으로 팔은 걸 다시 또 돈데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다 은행에서 하지만 저긴 다 개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데꼬들한테 국돈을 주는 식이에요.

보험 : 사보(사회보험료)를 월급에서 1~2%정도 뺐는데 월급이 2,500원이면 매달 2원50전 정도 뺐던 거 같아요. 보잘 것 없는 돈이라 누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일하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비용이 지출되는 거 같아요. 사회보험 기관은 없고 인민위원회 로동부에 가게 되면 사회보험을 보는 지도원은 하나 있어요. 공장기업소에서는 로동과장이 있고 수 급지도원이 있고 정량원은 있는데 사보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량원이 사보까지 보 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기실에서 기업소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거 같아요.

인체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기업소에서 인체보험 들라고 그래요. 300원짜리, 100원짜리도 있다고 했거든요. 인체보험은 석달에 한 번씩 보험료를 이렇게 월급에서 제겼는데 2,000원 타게 되면 30원 정도 한 거 같아요. 내가 인체보험에 들어서 한 번이라도 이 보험료를 물 고 죽었다고 해도 300원짜리 들었으면 300원을 다 주고 그랬어요. 여기로 말하면 생명보 험이나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월급이 조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니까 보험료 떼다는 소 리도 못 들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기업소 다니면 장례는 지원하거든요. 만약 종업원이 죽었잖아요. 화장하고 장례하는데 40 만원 들거든요. 종업원이 100명이다 하면 한 사람당 2,000원이면 2,000원씩 내라 그럼 또 다 내요. 월급에서 제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은 장례식 가서 부조는 부조대로 하고요. 장례 비로 국가에서 주는 돈은 국정가격으로 60원이에요. 우리 남편이 2009년 61살 환갑에 심 장마비로 죽었는데 사무소에서 오래서 가보니까 장례비가 나왔다면서 60원 주더라고요.

▲ 서00(여, 50)

보험 : 로임 탈적에 그 사회보험을 제해요. 로임의 한 1%를 떼는데 그런 걸로 요양소가 운영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거 사회보험료는 왜 떼는가?”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다친 사람들로 해서 그 다음에 뭐 나라 국가 요양소 운영하는 걸 지원하니까 나 라에다 바치는 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나도 팔을 다치다나니까니 그 요양소에 갔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없으니까 월급에서 깎 수도 없고 하니 까 최근 보험료 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북한은 좋은 게 내가 죽으면 아무 데고 묻히고 싶은데 묻힐 수 있어요.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소에서 장례비용 같은 거는 보 장을 해줘요.

▲ 남00(여, 39, 2016 탈북, 함경북도 온성)

장세 : 농산물은 그저 길바다에 앉아 팔아요. 처음에는 장세를 안 받고 보안원한테 쫓겨 다녔는데, 이제는 길거리도 장세를 다 받아요. 길바다 장세는 얼마 비싸지 않아요.

▲ 강00(여, 50살, 2015년 탈북, 량강도 혜산시 신흥동)

장세 : 아파트 앞에 나무창고가 있는데 그 앞에 앉아서 장사를 해요. 거기는 무슨 장세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대신 마당청소는 매일했어요. 음식을 파노라면 비닐봉 지도 널리고 양념장도 더러 떨어지고 하거든요. 하루에 1,000원 정도씩 인민반에다 내는 건 있는데, 그건 청소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탈북하기 전까지 3년 정 도 순대, 남새빵 장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전기세 : 전기는 안 오니까 내는 게 없어요. 지금은 전기해결을 бат데리로 하거든요. 태양판 가지고 불을 보니까 옛날처럼 어둡게 살진 않아요. 물은 유엔에서 방조를 해줘서 수도공 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시마다 물이 나오진 않아도 길어먹을 정도는 안 됐어요. 집집마 다 물탱크가 있어서 물을 힘들게 쓰는 정도는 아니에요.

▲ 김00 (남, 2013년 탈북, 혜산)

세금 :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위주 방식이 개인위주 방식으로 바꿨던 거죠. 공장기 업소는 점점 더 폐기상태에 들어가고 개인이 주가 돼서 운영하는 영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연간과제를 맡으면 은 그 과제를 수행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그런 공장이었다면 그런 공장은 다 마비가 되고 없어지고 새롭게 개인이익을 창출하는 공장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명목상으로는 국가공 장기업소지만 운영은 개인이 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원료자재 부분이라든가. 그 공장에서 생산품이라든가 그 관리를 다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국가에는 어느 정도 세금만 바치고요. 북한은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돼 있는데, 결국 세금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못했어요. 자기네가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만 정 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먹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생겨나더라고요. 지금 가만 놓고 보면 여기 개인자영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거 같아요.

▲ 유00 (여, 40, 2016년 탈북, 량강도 혜산시)

수익금 : 인민위원회 교육부에 다니다가 수익금을 내고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다 가 2003년 혜산방직공장에 들어갔거든요. 그 뒤로 계속 밀수를 했어요. 북한은 조직생활을 엄청

하는데, 그 조직생활 안 하면 여맹에서 달구고 직맹에서 달구고 해요. 그런데 적을 걸어 놓고 돈만 내면 아무 상관 안 해요. 수익금은 처음엔 국돈으로 30,000원 정도 받았는 데 최근에는 한 달에 20위안씩 받아요. 먼저 다니던 인민위원회는 매일 출근해야 됐어요. 아마 지금은 인민위원회도 수익금 내는 조가 더러 있을 거 같아요.

▲ 박OO(남, 23살, 2015년 탈북, 해산시)

꾸리기 : 북한에서 지금 대학 다니다 하면은 “어 그 집 돈 있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돈 있어야 되요. 대학이 지금 꾸리기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대주긴 대줘요. 그런데 국 가에서 시멘트 100지대를 보냈다면 실지 쓰려고 보면은 한 60지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예요. 내려오면서 개인 이익으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우는 게 학생들 자력으로 하는 거죠. 큰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노동력도 진짜 많이 들고. 북한에는 또 기계라는 게 없어 가지고 인력이 가는 게 많아요. 일은 일대 로 힘든데 돈까지 또 내니까, 나중엔 “내가 이 대학을 왜 다니나” 그런 허무감도 느끼 고 그렇죠.

▲ 유OO(여, 2015년 탈북, 평양)

납부금 : 식당운영하면 세금이 아니고 납부금이 있어요. 내가 식당운영 할 때 납부금을 열 마를 해야 한다. 뭐 연간에 5만 달러면 5만 달러 바쳐야 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건 구역에 다 바치는 게 아니고 혁명자금으로 바친다 하거든요. 5만 달러 계획 못하면 그 다음에는 상업과에서 내려와 검열하는 거죠. 왜 5만 달러 해야 되는데 너 3만 달러밖에 못했냐. 그럼 네가 변상하라 다음번에 이거 이월 시킨다 이런 식으로요.

▲ 김OO(남, 순천시)

장세 : 2005~6년 순천시 1개 시장에서 하루 장세가 7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규정에는 시장관리소에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증을 상업부에 주는 거예요. 시장관리소 부기원이 저녁만 되면 입금하러 가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도 못 다쳐요. 그 돈은 시인민위 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절 때 영예군인들이 뭘 도와 달라 하면 TV, 냉장고도 사주고 그런데서 떼서 자금을 쓰거든요. 장세가 전체 시 예산의 10%는 차지할 거예요. 그거도 우습게 볼 돈은 아니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장사하는 것도 등록을 하게 했 어요. 길, 장마당 길목에서 장사하는 것까지 돈을 다 받아요.

▲ 송OO(여, 2014년 탈북, 평양, 해산)

장세 : 인민위원회 상업과에서 장마당을 관리해요. 장마당관리소에서 관리원들이 매대를 나눠서 장세를 거둬요. 2013년에 장세가 1,500원 됐어요. 원래 800원인데 그게 오른 거예 요. 지금은 2,000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장세는 국돈으로 내요.

▲ 김OO(여, 52살, 2014년 탈북, 함경남도 리원군)

장세 : 장세는 시장관리소가 받아요. 시장관리소는 입당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급당이 있는 거고요. 매대마다 돌면서 장세를 직접 받는 사람은 장세관리원이라고 그래 요. 장마당에 손짐 보관하는데도 있는데 그건 100~200원 정도로 엄청 싸요. 리원군시장에 서 벌어들이는 장세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루에 10만원 이상인 거 같아요. 그것도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원군시장은 수산물시장이 따로 있어요.

저도 물고기를 팔았는데 장세는 시장에 들어갈 때 1,000원을 내야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의자를 놓고 1,000원을 받아야 들여보내거든요. 수산물시장은 고정 장사꾼이 아니라 오늘 남편이 배타고 바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왔다 싶으면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대거리, 되팔 이꾼이 고기를 가지고 가면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직접 파는 사람들이 있거 든요. 이 사람들은 팔고 가버리는 사람들이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세를 들 어갈 때 미리 받는 거예요.

▲ 허OO(남, 2014년 탈북, 온성군)

장세 : 탈북당시 일반보조매탁은 2,000원 기본매탁은 4,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장마 당 들어갈 때 자전거를 맡기는데 비용이 1,000원입니다.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 박OO(여, 2013년 탈북, 평양 승호구역)

장세 : 탈북당시 송신시장 장세가 1,500~2,000원으로 탁마다 달랐어요. 야채가 제일 싸고 공업 품이 비싸고요. 육류는 2,500~3,000원으로 비쌌고요.

▲ 김명국(남, 평성)

꾸리기, 장세 : 꾸리기사업을 이제는 시장에서 나오는 장세에 의존해요. 1명당 0.7달러에 옥전시장 장사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면 1,400달러잖아요. 각 동마다 시장이 있으니까 적어도 장사하는 사람이 3천명은 될 거고 하루 2,000달러는 벌어들일 거 같아요. 그걸 평 성시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꾸리기 하는데 많이 써요.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꾸리기사업도 활발하거 든요. 꾸리기라면 건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김일성김정일화온실, 물놀이장, 롤러스케이트 장, 공원 꾸리기. 잔디밭 조성, 강하천 가꾸기 등이예요. 그리고 아파트 도장은 몇 년에 한 번씩 다 바꾸거든요. 도로닦기, 보도블록 교체도 하고요. 연유도 사오고요. 북한은 시장만 닫으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거예요.

▲ 김OO(남, 2014년 탈북, 평안남도 순천시)

세부담 : 제가 교원으로 32년 있었는데, 화폐교환 이전에는 아무리 고난의 행군이라도 간부 들이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학교에 강압적으로 내려먹이지 않았습니 다. 옛날엔 교장, 부교장 되는 걸 금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폐교환 이후에는 일군을 안 하겠다고 할 정도입니 다. 교장, 부교장,

공장장, 직장장 같은 걸 하면 너무 내리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 차라리 로동자로 살겠다. 이제 교원도 안 하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국가정책은 매일과 같이 교원총회 등에서 “세부담 시키지 말라. 세부담 하는 교원 처벌하라. 일꾼을 처벌하라” 이렇게 합니다. 교원강습이 8월, 1월 달에 있던 말입니다. 그 1월 달에 교원총회 할 적마다 사상투쟁도 하고 매일과 같이 뭐 자료를 잡아 가지고 검열은 또 더 많이 내려옵니다. 검열 와서 뭐 뇌물이라도 고이면 그냥 빠졌다가 또 검열이 내려옵니다. 또 빠지면 또 검열. 뇌물이 계속 거기 들어가는 뇌물까지 들어 가다니니까 그 부담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총화는 총화대로 세부담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교장선생이 이거 창문틀을 하라는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포치하십니까. 그 포치하는 거는 일개인적으로 학생한테 그냥 개 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포치하지 말고 어느 학부형한테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라. 제발 소리 나지 않게 하라. 말은 이렇게 포치하지만은 매일과 같이 떨어지니까 힘 있는 학부형은 10명인데, 그 10명 들고 돌다 못 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학부형도 나도 안 하겠다. 우리 애도 학교 안 보내겠다. 이정도 되니까 할 수 없이 개별적으로 또 세부담 시킨단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보다도 북한은 중앙당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있고 도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부, 시당교육부가 있는데, 그 시당교육부가 지금 시교육부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도 있고 또는 시청년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도 있고 제각기 과제가 있던 말입니다.

교육부, 시청년동맹에서 내려오는 과제도 많아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자기네 제기되는 판자 무슨 꾸리기 뭐 한다하고 그런 식으로 걷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다나니까 교육부부장 인민 위원회 교육부부장 또는 시청년동맹 등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학교도 자체로 연구실 꾸리기 이번에 한다고 합니다. 계속 검열 내려오니까 꾸리기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학생 뭉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담임인지 아니면 수매원인지 모를 정도예요. 하루도 안 빠지는 날이 없으니까 그저 선생들이 “제발 모으기만 하지 않고 학생들 공부만 시키면 좋겠다” 하고 막 그렇게 생 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전수업하고 오후는 무조건 작업입니다. 학교작업을 하던 공 공적으로 시교육부에서 떨어지는 작업을 하던 아니면 농촌지원을 하던 하루도 작업 없는 날이 없습니다.

졸업반 학부모들이 선생한테 돈 모아서 텔레비 하나 해주자 해도 그것도 세부담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주겠으면 너 개인적으로 줘라. 세부담은 시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주고파서 주는 거는 받으라는 거예요. 교원한테.

▲ 양OO(여, 2015년 탈북)

꾸리기 : 학교는 전문 그저 학생들한테 다 쫓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무슨 뭐 꾸리 기하고 무슨 거 하는데 다 부형들한테서리 돈 빨아내서 한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럴 바에는 학교 공부를 안 시키겠다. 공부 못해도 된 다. 안 보내는 경우가 많고. 나는 교원 할 때도 우리가 학생 수가 무슨 뭐 한 학급에 50명 이다 하면은 출석률이 40명, 45명. 그 나머지 뽑은 거는 가는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 어서 못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없어서 낼 게 없어서 못 온다든가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2015년 탈북할 때는 학생 수가, 학교를 많이 안 가는 거가... 우리 가 무슨 100%에서 보면은 한 30% 정도는, 3~40% 정도는 학교를 못 가는 게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 박OO(여, 46살, 2015년 탈북, 회령)

땅세 : 산에 소토지를 700평 정도 했는데 국토부에서 돈을 받으러 다니다가 2년 정도 전부 터는 산림감독대가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국토부에 산림도 속했는데 김정은이 산림조성을 세계 얘기하면서 산림과가 국토부에서 따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세라고 하는 데, 이번에 얼마 내라면 냅니다. 아니면 땅 내놔라 이러니까 그저 내라면 내라는 대로 그냥 내죠. 1년에 평균 10만원 정도 냈을 겁니다. 대체로 보면 북한에서는 어르신들이 사망되기 전날까지도 나가서 일하거든요. 자식들도 나가서 다 일은 하는데 분배가 없으니까 산토지 를 해야 먹고 산단 말입니다.

산림에 산림이용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만 또 산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산림조성을 위한 묘목 자리우기라고 내세웠는데, 아무튼 어 르신들이 나가 일하는 날이 많아요. 한 달에 거의 보름은 나가 일하는 거 같아요. 거기 동원돼서 이일 저일 하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아무 수입이 없어도 소토지에 목메서 그렇게 노력을 바치는 겁니다. 소토지를 허용하는 대신 땅세는 땅세대로 바치고 노동력까지 제공 하는 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보다 어르신이 있는 집에 소토지가 더 많거든요. 옛날에는 소토지 에 대해서 세금이란 게 없었거든요. 우리가 땅세라고 내는 게 한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내놔야 3,000원 정도 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 걷는 횟수도 많고 그만큼 돈도 많아졌거든요. 산림이용반은 김일성 때부터 있던 거고요.

세부담 : 땅세 뿐 아니라 세대주는 직장에 여자들은 여맹에 돈을 내야하고 아이는 학교 다 니자면 돈을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나니까 수입의 30%는 이런 세부담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 최OO(여, 2015년 탈북, 평양)

장세 : 2015년 기준으로 장세는 품목별로 틀린데 공업품매대가 5,000원이에요. 수산물, 육 류, 공업품 매대 장세가 비슷하고 다른 매대는 2~3,000원 정도 할 거예요. 남새가 1,000원 과일이 2,000원 정도 할 거 같습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북한법연구회,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17).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동북아 경제연구』(서울: 동북아경제학회, 2013).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서울: 통일문제연구소, 2015).

<북한 문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1』(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년 5월 10일. 조선중앙통신 , 2017년 3월 30일.

<기타>

“돈줄 마른 북한, 장마당돈주에 소득세 징수 나서,” 『중앙일보』, 2016년 3월 15일.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통일뉴스 , 2016년 3월 31일.